

---

# 2020년 경제정책방향

## 부처별 핵심과제

---

2019. 12. 19.

관계부처 합동

## 순 서

1. 기획재정부 .....	1
2. 교육부 .....	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
4. 행정안전부 .....	7
5. 문화체육관광부 .....	9
6. 농림축산식품부 .....	11
7. 산업통상자원부 .....	13
8. 보건복지부 .....	15
9. 환경부 .....	17
10. 고용노동부 .....	19
11. 여성가족부 .....	21
12. 국토교통부 .....	23
13. 해양수산부 .....	25
14. 중소벤처기업부 .....	27
15. 공정거래위원회 .....	29
16. 금융위원회 .....	31

## 기 획 재 정 부

### 1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목표로 발굴·집행 추진

#### 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수준 발굴 추진

\* 4단계 10조원 추진, '20년 중 15조원 목표로 추가 발굴

#### ② 민자사업 15조원 수준 집행·발굴 추진(집행 5.2조원, 발굴 10조원 수준)

#### ③ 공공기관 투자 60조원으로 확대 추진('19년 계획 55조원 → '20년 60조원)

### 2 민간 투자소비 세제 인센티브 제공

#### ① 민간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본격 가동

\* ①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투자세액공제를 한시 상향,  
②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③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6개월 추가 연장

#### ②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하여(예: 11월 1주 토요일) 당일에 구입한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세(10%) 환급 검토\*

\*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 실효성 등을 판단

#### ③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

\* 10년 이상 노후차 → 신차 교체시 개소세 인하(6개월 한시, 100만원限),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최대 400만원) 일몰 연장('19말→'22말)

### 3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착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

####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사업, 25.4조원) 본격 착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 위해 프로젝트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기업에 도급 의무화

\* '20년 1.9조원(총사업비) 규모 사업 착공·발주 추진,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총사업비 1.3조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총사업비 1조원) 등 R&D 연구도 본격 추진

### 4 적극적 거시정책 및 리스크 관리 철저

#### ①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19년 목표 61.0% → '20년 목표 62.0%) 및 지방재정도 성립전 예산사용 제도 활용 등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

#### ② 부동산, 가계부채, 금융·외환, 통상, 구조조정 등 5대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및 대응 철저

### 5 산업혁신 및 혁신성장

#### ○ DNA(Data, Network, AI) 중점 투자 및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성장 가속 및 유망 신산업 활성화

▪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 공개·이용 확대 등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

▪ 세액공제, 행정비용 절감 등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마련

\* 5G 망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개편 신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완화

## 6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및 체감성과 확산

### ① 범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체계 구축,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

\*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출범, 서비스산업 자문단 운영

\*\*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 분야에 걸친 제조업대비 차별 재점검·해소

### ② 의료접근성 제고, 「K-뷰티 혁신전략」 마련, K-pop 전용 공연장 착공 등 유망 서비스업 체감성과 창출

## 7 지속가능한 재정의 역할을 위한 재정혁신

### ① 지출구조 효율화\*, 재정운용상 재정 누수·낭비 적극방지\*\*

\*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및 성과관리제도 대폭 개편 / \*\*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 ② 재정건전성 유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재정여력 점검을 위한 장기재정전망 실시, 재정준칙·순채무 지표 도입 검토 등

## 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 ○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 및 효율성·생산성 중심 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 ①중소기업지원센터와 프로그램 신설 ②공공기관헌장공감규제개선방안반별마련 ③안전등급제 도입

\*\* ①자율정원조정제도 조기종료 ②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EWS) 도입 ③일 중심의 보수인사체계 구축

## 9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인프라 확충

### ○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 효율적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 10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 미래 선제대응

### ①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본격 대응

#### ▪ 제2기 인구정책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 선정\*

\* ①1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 ②1기 과제 중 구체화 필요과제

③국민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 ▪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대책 등 추진

### ② 「생산성 혁신\*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수립

\* ①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②인적자본 투자와 일하는 방식 혁신

③지식·정보 투자 다변화 및 혁신 생태계 육성 ④경제 및 사회시스템 혁신

\*\* ①다같이 행복한 개인의 삶 ②서로 돌보는 공동체와 사회관계 ③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 교 육 부

### ① 고교무상교육

- 교육 기본권 실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구조 개선 및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시행

\* '19년 2학기 고 3학년부터 시행 중('19.8~),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경감

- '20년 고 2·3학년 시행 및 '21년 전 학년으로 확대·완성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② 고졸취업 활성화

- 현장실습 및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선취업 후학습'의 새로운 청년 성장경로 구축

\* '20년부터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산업 변화에 맞추어 학과 개편 지원,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확대, 후학습 과정 확대 및 장학금 지원 추진

### ③ 근로장학금 확대

- ① 근로장학금 시급단가 인상\*을 통해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강화

\* 교내근로 : ('19) 8,350원 → ('20) 9,000원 / 교외근로 : ('19) 10,500원 → ('20) 11,150원

- ② 교외 근로장학생 지원인원 확대\* 및 교외근로 의무비율\*\* 확대로 사회·직업체험 기회 제고

\* ('19) 4.6만명 → ('20) 4.9만명 / \*\* ('18) 38% → ('19) 41% → ('20) 42%

### ④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19) 연 2.2% → ('20) 연 2.0%

### ⑤ 4단계 BK21 사업 추진

-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사업' 유형을 신설하여 8대 핵심선도사업 및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등 석·박사급 융·복합 인재 양성

## 6 미래 첨단분야 인재 양성

- ① 대학의 여건·특성 및 학생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첨단 학과 운영이 용이하도록 제도 정비\*

\* 계열 간 융합학과 신설 요건 완화, 3·4학년 대상 융합학과 신설 근거 마련

- ② 대학별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 학과 신설을 통해 인력 양성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1·2학년 중도 이탈 학생 수로 대학별 매년 100~400명 보유

## 7 대학혁신지원사업

-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 및 기본역량제고 지원

- (Ⅰ, Ⅱ유형) 대학의 건학이념과 여건에 맞는 자율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모든 대학을 일반재정으로 지원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일부 역량강화대학

- (Ⅲ 유형)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Bottom-up)할 수 있도록 지원

## 8 대학 강사제도 안착

-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지원, 제도 안착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 추진

- 「고등교육법」 개정('19.8.1.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소요되는 강사제도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지원

\* 방학 중 임금(577억원), 퇴직금(232억원) 및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49억원)

## 9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및 법적기반\*\* 마련

\*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20년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11교 추진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하여 설치 과정, 관리책임, 학교 교육활동 우선사용 원칙, 학생 안전 확보 등 규정

## 10 학교공간혁신 추진

-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교육 대응 위해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설계 통한 다양·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

※ 영역단위 (5년간, 1,250교, 5천억원): ('19)600억원 → ('20)1,000억원 → ('21)1,000억원  
→ ('22)1,200억원 → ('23)1,200억원

※ 학교단위 (5년간, 500교, 3조원): ('19)300억원 → ('20)6,000억원

#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 1 과학기술 중심 혁신인재 양성 및 유치

### 1 우수 이공계대학원 중심 혁신인재 양성\*

\* KIURI 연구단(박사 후 연구원) 시범선정, 차세대(석·박사) 인력 양성 확대

### 2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 산학연 주도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 유치 지원

※ 출연(연), 과기원, 재외과협 등을 통한 500명 유치 추진(향후 5년간 3,000명)

## 2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 1 지역의 첨단혁신성장 거점인 강소특구\* 기술 사업화 과제 지원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

\* R&D 전 과정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특례 도입 및 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 2 지역별 연구중심대학(인재양성)-기업(채용)-특구(창업·기술이전)간 패키지 지원

## 3 바이오헬스·무인이동체 분야 미래 핵심기술 확보

### 1 신약, 의료기기 등 미래유망 바이오산업의 원천기술개발\* 및 감염병, 뇌과학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연구개발\*\* 지원 강화

\* (신약) 타겟 검증, 후보물질 발굴 등, (의료기기) 총사업비 1.2조원('20년 신규)

\*\* (감염병) 신·변종, 해외유입 대응 등, (치매) 총사업비 1,987억원('20년 신규)

▪ 신약, 재생의료, 뇌과학 등 범부처 대형 예타를 차질없이 추가 기획·추진

### 2 자율드론·선박 등 무인이동체 공통원천기술 개발\* 및 공공혁신조달과 연계

\* 총사업비 1,703억원('20년 신규) → 공통원천기술 단계적 개발 및 기술실증 추진

## 4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

○ 시급한 주력산업 기술자립 지원 강화 및 관련 기반기술 개발 확대

▪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소재·부품 '중점요소기술' 개발 및 선도형 소재·부품기술 기반 강화를 위한 미래기술 선점 추진

## 5 데이터경제 활성화

○ 빅데이터 플랫폼·센터('19년 구축, 10개 분야)의 본격 운영·연계\*  
→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한 혁신서비스 창출 및 데이터 시장 확대

\* 개방 데이터(누계) : ('19) 1,458종, 640TB → ('20) 3,094종, 1,310TB

## 6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 ①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차세대 AI 등의 개발과 AI 집적단지 조성으로 기술·산업경쟁력 제고

\* 총 1조원 규모('20년 신규) : (과기정통부)설계·소자, (산업부)장비·공정

- ② AI 대학원·실무인재 교육과정 확대\* 등으로 AI 인재 육성 강화

\* (AI 대학원) 5 → 8개, (실무인재 교육과정) 수도권→ 지역 4개 권역

## 7 5G+ 생태계 본격 확산

-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①공공수요 창출\*, ②테스트베드 확충(5→12개소), ③제도 정비\*\*, ④5G+ 분야별 후속정책 수립 등 추진

\* 5G 콘텐츠 플래그십 및 XR+α 프로젝트(실감콘텐츠), DNA+드론 기술개발 등

\*\* '26년까지 5G 주파수 2배 확대 및 융합보안 법적 근거 마련 등

- 5G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해 주파수 이용체계 개편\*(전파법 개정 추진)

\* 주파수면허제 신규 도입 →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 권한을 동시에 부여, 전파이용대가 개편 → 할당대가, 전파사용료의 이원화된 체계를 면허료로 통합

## 8 ICT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및 R&D 바우처 본격 추진

- ① DNA 기반 '공공 시범사업과 민간서비스'에 선제 적용하고, 공유경제·디지털헬스케어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의 공론의 장으로 확대

- ② 중소기업의 ICT 융합사업화 촉진을 위해 ICT R&D 바우처\* 확대 추진

\* 총 3,224억원 예타('20년 신규, '20~'24), 단기(1년)·중기(2년) 과제를 병행 지원

## 9 선도형 연구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도전형 R&D 확대

-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임무를 명확히 설정하고 보다 유연한 연구 제도를 활용하는 혁신도전형(High Risk-High Impact) R&D\* 추진

\* '혁신도전 프로젝트' 기획, G-First, 과학난제도전융합R&D 등 신규 추진

## 10 2030 미래유망 성장동력 발굴 및 고도화

-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 수립 → 미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규아이템 발굴 및 중장기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정비 추진

\* R&D 투자 연계 강화, 선제적 규제 혁신, 인력 양성, 민·관 전담 추진체계 강화 등 성장동력의 지속적·일관된 육성을 위한 법체계(과기기본법 개정 등) 구축



## 행 정 안 전 부

### ① 지역 여건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고용 지속 창출
  -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기획·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을 통한 청년의 실업해소와 지역정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20년 26만명)

### ②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발행규모 확대('19년 2.3조원→'20년 3조원) 및 발행액의 4% 지원
  - 운영관리, 시민사회 참여 등 지자체 공모사업 실시

### ③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및 윤리경영

- 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 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지자체 조례로 노동이사제 자율도입 유도를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책임경영 기반 조성 등
- ② 지역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면제제도 신설, 대상기준 상향조정 등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개선
  - 타당성 검토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광역 200억원(기초 100억원)에서 500억원(기초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④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 확대 추진

- ① 재난·재해·사고위험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인프라 정비 및 지속 확충\*

\* 위험도로 구조개선(신규 56개소), 교통안전인프라 설치(신규 996개소) 등

- ②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신규 4개소)

\*\* 평화누리길(자전거) 573.0km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도보) 31.5km 조성

## 5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1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기반시설 지방세 감면 연장(~'22.12.31.)
- 2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세 감면요건 완화 및 연장(~'22.12.31.)
- 3 지방 물류·관광산업 지방세 감면 연장(~'22.12.31.)

## 6 미래대비 지역산업 개선 지원

-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10%p) 확대(~'22.12.31.)
- 2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연장(~'21.12.31.)

## 7 지역맞춤형·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 등  
\* 지역기업·주민·지자체 등에서 규제애로 발굴, 부처협의,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

## 8 법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 1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으로 제공('20년~)  
\* AI기반 통합 서비스 환경 구축생애주기 서비스 확대(~'22년10개이상) 등
- 2 본인 관련 데이터를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20년~) 등  
\*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 자기정보 활용 전자증명서 발급(100종, '20년) 및 모바일 신분증 도입('20년 공무원증 대상 시범사업 후 확대) 등

## 9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4차 산업 창출

- 1 스마트시티 등 미래사회에 걸맞게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추진 등  
\* 건물 중심 주소체계 → 사물주소(생활안전, 경제활동, 산업창출), 입체복합 공간 등으로까지 주소개념 확대
- 2 新기술과 융합된 주소기반 4차 산업 표준 실증모델\* 개발·보급  
\* (핵심분야) 도서오지 주소기반 드론 배달, 도심지 주소기반 드로이드 배달, 사물주소 이용 사물인터넷, 상세주소 실내 내비게이션, 주차장 주소 이용 자율주행 등

## 10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운영

- 행정·공공기관에 데이터 전문인력 지원 및 청년들에게 경력개발 기회 제공으로 실무형 데이터 전문가 양성  
\* 빅데이터 분석 전문교육(2개월), 일경험 수련(4개월), 취업컨설팅 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 1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광 지원

- ① 청소년, 근로자 등 청·중장년, 노년층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광 지원으로 국민 관광 향유권 제고 및 국내관광 촉진

- ▶ 청소년 : 취약계층 청소년(특수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 등) 체험여행 5,000명 지원
- ▶ 청년 : 대학생 대상 주요 관광지 점검 및 관광 콘텐츠 개선 추진(150명)
- ▶ 근로자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 적립시 정부가 비용을 추가 지원(근로자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10만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실시(8만 명)
- ▶ 노년층 : 고령자 특성에 맞는 여행교육 프로그램 지원(360명)

- ②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30%, 도서·공연비 등 추가한도(100만원)에 포함) 추진

\*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 실효성 등을 판단

## 2 문화·관광 지역거점 확대 및 경제 활력 확산

- 관광거점도시 및 문화도시 조성, 지역 문화관광 축제 활성화

- ▶ 관광거점도시 육성 : 국제관광도시(1개소) 및 지역관광거점도시(4개소) 선정('20.1.)
- ▶ 문화도시 조성 : 문화도시(1차, 10개 이내) 선정 및 통합지원(도시당 10억원 내외)
- ▶ 관광기업지원센터 확대 : 관광벤처 육성, 일자리센터 운영 등을 전담할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조성 확대('19.1개소→'20.4개소)

## 3 방한관광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 중국·일본 젊은층 유치 확대, 동남아 관광객 환대사업 실시, 한류·웰니스 등 고부가가치 관광 등으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 ▶ 주력시장 : 중국 대학생 비자서류 간소화제도 활용 홍보, 일본 젊은층 新한류 연계 마케팅 실시
- ▶ 신흥시장 : 현지매체 홍보, 관광안내소 운영(5개소), 관광지 및 쇼핑 할인판촉, 단체관광객 대상 공항 환영행사 등 동남아 환대사업 실시
- ▶ 한류관광 : K팝 행사, 한식·뷰티 등 연계 K-컬처 페스티벌 '20년부터 연 2회 개최
- ▶ 의료관광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획득 의료기관에 대해 운영자금 융자 지원
- ▶ 웰니스관광 : 웰니스 관광명소 확대선정('19년 41개소→'20년 50개소),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추가 지정('19년 2개소(경남, 충북)→'20년 3개소)

## 4 관광-항공 연계, 외래관광객의 지역 관광 촉진

- 지방공항 및 국제선 환승 연계, 외국인의 지역 관광 적극 지원

- ▶ 5개 지방공항 입국 외래관광객 환대기간 지정, 항공사-여행사-지자체-지역 관광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지방공항 환대주간' 추진

- ▶ 지방공항 배후 지역의 문화·예술사업 연계, 공항내 공연·체험행사 개최 추진
- ▶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방공항 환승객에 72시간 무비자 체류 허용
  - \* (현행) 인천공항에 한해 허용 → (개선) 환승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방공항에 추가 허용
- ▶ 제주 방문 동남아 3개국(필리핀·베트남·인나) 단체관광객 대상 지방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 허용
  - \* (현행)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허용 → (개선)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객 추가 허용

## [5]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 성장 등 전 단계 지원

### ○ 관광기업에 대한 자금, 마케팅,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 관광벤처 사업화 지원: ('19) 80개, 20백만원 → ('20) 150개, 40백만원
- ▶ 투자연계 액셀러레이팅, 혁신바우처, 선도기업 육성, 관광플러스 팀스(TIPS) 신규 도입
- ▶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19) 130억원 → ('20) 300억원

## [6] 공유경제를 통한 신산업 혁신 지원

- 공유숙박 법제화를 위한 민관상설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자료 제출 등 숙박중개플랫폼 의무사항 마련, 공유숙박 법안 구체화

## [7] 금융·세제 지원 등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 ▶ 정책금융 : 1천억원 규모의 모험펀드 신규 조성, 콘텐츠 완성보증 등 콘텐츠 분야 보증 확대
- ▶ 세제지원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8] 실감콘텐츠, 게임, K팝 등 고성장 핵심 콘텐츠 지원 강화

- ▶ 실감콘텐츠 : 광화문 일대 한국대표 실감문화체험공간 조성(2개소), 박물관·미술관 연계 체험관 조성('19년 국립박물관 4개소→'20년 국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
- ▶ 게임 : 제1회 "한중일 e스포츠대회" 개최 추진으로 국내 게임콘텐츠의 e스포츠화 지원
- ▶ K팝 : 서울 아레나 등 K팝 전용공연장의 착공 및 차질없는 준공 지원

## [9] 문화·체육·관광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개선

- ▶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20.上)
- ▶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변경 등 경미한 조성계획 범위 확대(10개월 → 1개월)
- ▶ 비디오물·영화·게임·음악·출판·인쇄사업자 폐업 신고기한 연장(7→30일, 법개정 추진)
- ▶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설치 기준 완화('20.3월)
- ▶ 게임 플랫폼별 게임등급 중복심의 개선('20.1월), 복합장르 게임등급심의 수수료 기준 마련('20.10.월)

## [10] 취약계층 여가 환경 조성 확대

- ▶ 이동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
  - \* 자료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책나래 서비스' 참여 도서관 : ('19) 880개 → ('20) 920개
- ▶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19년, 연 8만원 160만명 → '20년, 연 9만원 161만명)

## 농 립 축 산 식 품 부

### ①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

- 기존 직불제\* 통합, 쌀에 편중된 생산구조 개선 및 중소농 소득안전망 강화
  - \* 쌀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경영이양,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
- 모든 작물에 동일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에 따라 단가를 차등(소규모 농가 우대)하는 한편, 생태·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강화

### ② 로컬푸드 확산으로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 지역별 푸드플랜 수립 및 농림사업 패키지 지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군대, 학교 등 공공급식 분야 로컬푸드 지속 확대
  - \* 로컬푸드 유통비중 지속 확대 추진 : ('18) 4.2% → ('20) 8 → ('22) 15

### ③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화

- 채소가격안정제('19년 10%→'20년 15%)와 지자체·생산자단체 수급 조절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실측조사 확대 등 관측 시스템 고도화

### ④ 농촌관광, 외식업 등 국내소비 촉진

- ① (농촌관광)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15곳), 경관보전직불 지역을 활용한 여행·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② (외식) 동네 맛집 알리기,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등을 통한 외식 소비 홍보 강화

### ⑤ 농업 전반으로 스마트화 확산

- 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청년창업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2개소),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지원('20년 신규, 8억원)
  - \* (1차: 상주, 김제) 청년보육시설 완공, (2차: 밀양, 고흥) 착공
- ② 축산('19년 3개소 → '20년 5개소 추가) 및 노지('20년 2개소, 신규)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 조성, 농업용 로봇 등 첨단 농기계 R&D 확대

## 6] **종자, 생명소재 등 그린바이오(식량·자원분야) 산업 육성**

- ① 그린바이오 분야 신산업 육성방안 수립(바이오산업 혁신 TF)
- ② 골든시드프로젝트를 통한 종자개발 지원('20년 111품종) 및 소규모 농가 육묘업 등록 시설기준 완화(990→330㎡) 등 규제개선 추진

## 7] **5대 유망식품\* 육성 및 수출구조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력 제고**

\* ① 맞춤형·특수식품, ② 기능성식품, ③ 간편식품, ④ 친환경식품, ⑤ 수출식품

- ① 기능성 표시제\* 시행,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등 제도 정비,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및 기술지원 등 추진

\*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② 신남방·신북방 등 신시장 개척 및 대표품목 육성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수출 지원 인프라 확충

## 8] **농식품 벤처·외식업 등 창업지원 강화**

- ①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 사업화자금 지원한도 상향('19년 2천만원 → '20년 3천만원)
- ② 청년 창업환경 마련을 위한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20년 신규, 5개소)

\* 지역 유희공간 활용 공유주방 조성, 임차료·인테리어·컨설팅 등 1개소당 4억원 지원

## 9]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농장 육성**

-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약자 대상으로 농업과 연계한 교육·돌봄·고용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정(4개소)

\* 활동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등 지원(개소당 2억원), 지역별 사회적농업 중심기관으로 육성

## 10] **농촌인구 과소화 및 농업인력 부족 대응**

- ①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농촌인력중개센터 : ('19) 50개소 → ('20) 70개소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 ('19) 3개월 → ('20) 3개월, 5개월(신설) 중 선택

- ② 여성농업인의 농업 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19년 57개소 → '20년 74개소)

## 산업통상자원부

### 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

❶ 6대분야\*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자동차, ④전기전자, ⑤기계·금속, ⑥기초화학

❷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20년 20개 이상 목표로 적극 발굴 및 R&D·자금·입지·규제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

\* 협력사업(모델) 유형: ①협동 연구개발형 ②공급망연계형 ③공동투자형 ④공동 재고확보형

### ② 신산업 육성 및 성과 창출

- BIG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성장 가속 및 유망 신산업 활성화
  -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팹리스 육성 등을 통한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월)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한 성과 창출
  - 친환경차 국내보급 활성화, 미래차 기술개발·산업 생태계 조성
  - 이차전지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로봇 개발·보급 확산 지원, 수소산업 전주기 기술 개발 등 추진

### ③ 주력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한 제조강국 도약

-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추진
  -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산단 확대·고도화
  - 친환경 차량·선박,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 등 지원
  - 자율주행차·선박, 스마트 의류,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 신상품 사업화 촉진

### ④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 지원

❶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19.9월)」 이행 가속화 및 보완대책 추진

❷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심 수출현장 애로 해소 및 K-pop, K-뷰티 등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 수출바우처 등 수출마케팅 예산 확대 : ('19년) 3,294억원 → ('20년) 3,775억원

❸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 통상정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수출·해외진출 정보제공 강화



## 5 **국내 소비 적극 진작**

- ① 민간 주도 대표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 지원
- ②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구매금액의 일부 환급** 지원을 통해 소비 촉진  
\* 세부 지원사항(환급대상, 품목, 환급비율, 재원 등)은 1/4분기 중 마련·발표

## 6 **투자 활성화 지원 강화**

- ① 국내·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 방안 마련 및 경자구역 혁신전략 수립  
\* 기업 투자부담 맞춤형 지원, 현장애로·규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재검토 등
- ②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 지원

## 7 **규제 샌드박스 활용 가속화 등 규제혁신**

- 산업적 파급력, 국민체감도가 큰 사례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가속화하고, 승인 기업에 대해 쏠단계 밀착지원\* 강화  
\* 자금, 특허, 공공조달, 컨설팅 등

## 8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확대**

- 개정된 기업활력법\*에 맞춰 패키지(제도·자금·세제) 지원 확대  
\* 지원대상이 과잉공급 업종 기업과 함께 신사업 진출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주력산업에 속한 기업까지 확대

## 9 **적극적 통상 전략 추진**

- 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 고도화  
\* RCEP 및 필리핀 양자 FTA 연내 타결 추진 등
- ② 신북방정책 성과 확산 및 교역·투자 다변화 추진  
\* 9-브릿지 행동계획의 성과 가시화, 북방 인프라 수주 지원체계 구축 등

## 10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활성화**

- 지역별 스마트특성화 전략에 따른 기반구축 사업 본격 실시, 지역 주도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및 다부처 사업 연계 방식 도입  
\*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실증프로젝트, 기업유치 지원 등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 제조업 침체우려 지역 중심으로 주력산업 혁신 및 新주력산업 창출 위한 지역활력 프로젝트 본격 실시



## 보 건 복 지 부

### 1] 초고령화에 대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Community Care)을 통해 노인·장애인 욕구(needs) 기반 의료·돌봄·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조성
  - \*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 ('19)75개소 → ('20)100개소 → ('22)250개소
  - \* 방문의료, 퇴원이동지원, 재가의료급여 등 신규 서비스 시범사업 지원 확대 검토

### 2]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구축을 통한 돌봄경제 육성

- ① 스마트홈 보급 시범사업, 돌봄로봇·보조기기 개발·실증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서비스 제공 효율성 개선 및 기반 구축
- ② 노인·장애인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 R&D 확대 추진

### 3] [DATA] 의료정보 생태계 혁신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 견인

- ① 공공기관, 민간병원 데이터 연계 및 활용사업 대폭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② 100만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29)을 위한 1단계 사업('20~'21) 착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 본격 추진
- ③ 진료정보 교류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마련,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확산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정보인프라 확충

### 4] 첨단재생의료 기술도약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 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월)을 통해 재생의료 임상연구 도입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②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 치료제 개발 등 R&D 투자 확대
  - \* 10년간('21~'30) 범부처 R&D 사업 추진

### 5] [화장품] K-뷰티 글로벌 도약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 ① △기초소재·신기술 연구개발(R&D)\* △규제혁신\*\* △신남방 진출 지원 등 K-뷰티 브랜드 제고 △K-뷰티 클러스터 추진
  - \* 세계기술수준 대비 95%('30년) 목표
  - \*\*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맞춤형화장품 신설 및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 6 제약바이오 기술혁신 지원 및 규제혁신

- 1 제약바이오 메가펀드 조성 및 혁신적 신약개발 전주기(후보물질~사업화) R&D 지원,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선진 교육체계(NIBRT) 도입
- 2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19.12) 추진 및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 협력단 설립근거 마련, 병원-바이오 벤처기업 협업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Field Lab),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지원 확대

## 7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인구고령화 대응

- 고령화 대비·경제성장동력 창출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 '범부처 추진단' 설치 및 운영, 주거, 여가, 금융,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 수립

##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 1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조성, ICT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체계 구축 검토
  - \* 해당국가 여건 기초 조사 통한 타당성 검토(20.上), 해당국과 협의 실시(20.下)
- 2 우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 확대(20.下, 2년 → 4년)

## 9 사회수요에 대응한 일자리 지원 강화

- 1 연내에 사회서비스일자리 9.5만개 신규 확충
  - \* 다양한 신규 사업을 기획·발굴하여 '22년까지 34만명+α 신규창출 추진
- 2 노인일자리 신규 확충 및 참여기간 연장을 통한 노인 빈곤 완화 추진
  - \* 노인일자리 13만개 신규 확대 및 공익활동 사업 참여 기간 연장(9개월→평균 11개월)

## 10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포용 사각지대 해소

- 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등 생계급여 제도개선
- 2 노인·장애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장애인연금(월 25→30만원) 인상 추진
  - \*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 소득하위 20% → 40%
  -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환 경 부

### 1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및 물인프라 투자 확대

#### ① 상수도 관리 스마트화

\*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20~'22) 도입, 유역 수도지원센터(4개소) 구축

#### ② 노후 상·하수도 정비사업\* 투자 가속화, 댐 시설물 안전성 강화\*\*

\* (상수도) 市지역 정비사업 '20년 일괄 착수, 기존 사업 대상지 외 추가 공모사업 발굴  
(하수도) 정밀조사(5,892km) 후 관로 개선 추진('19년 1,571억원 → '20년 3,153억원)

\*\* 취수탑 내진보강, 비상방류시설 설치 등('19년 220억원 → '20년 380억원)

### 2 국립공원 저지대를 활용한 체류 인프라 확대

#### ○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류 인프라 조성 및 탐방프로그램 구축

\* '에코랏지' 등 체류 인프라 조성, '트리탑 트레일' 등 신개념탐방시설 설치, 탐방로 정비, 지질공원 위상 제고, 스탬프 투어 도입 추진 등

### 3 물산업 육성

#### ○ 혁신형 물기업\*, 수열에너지 활성화\*\*, 물클러스터('19년 준공) 본격 운영

\* 강소 물기업 10개 육성(지정) / \*\*하천수 사용료 감면 법령개정 및 시범사업 실시

### 4 생물기반 바이오 산업 활성화

#### ○ 생물자원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경제 창출

\* (자생생물 발굴) 국가 생물종 목록(6만종) 및 확증 표본정보(3.7만종) 구축('23년)  
(생물소재 분양/생태모방) 소재 분양 활성화, 생태계 원리 모방·응용 등

### 5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 보급·육성

#### ○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

\* '19 → '20년 확대 계획

- (전기차) 승용 4.2 → 6.5만대, 급속충전 1.2 → 1.5천기 등
- (수소차) 승용 4 → 10.1천대, 버스 35 → 180대 등

## 6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관리 및 국제 공동대응 강화

- 1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전방위적 확대
- 2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12~3월) 계절관리제를 통한 집중 저감 추진  
\* 석탄발전 가동 최대한 중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3 한-중 공동연구 확대, 예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 한-중 협력 강화

## 7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강화

-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20년의 경우 '17년 대비 2.5% 감축)  
\* 범부처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배출권거래제시장 기능 강화
- 2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대응 R&D 개발 및 도시 물순환 기반 구축  
\* 기존도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신도시 저영향 개발 기법 도입 등

## 8 수입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국내 재활용 시장 활성화

- 1 국내 석탄재 재활용 가속화\*, 단계적 수입 감축 추진  
\* 발전사 재활용 의무목표 상향, 석탄재 매립 부담금 상향,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 마련
- 2 국내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 시멘트 소성로 폐비닐 사용 확대추진, 수입 폐지 현품검사 실시 등

## 9 미래 폐자원 재활용 기반 구축

- 1 신규 폐기물(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공공회수 체계 도입 및 재활용체계(EPR) 구축  
\* 4개 권역별 미래폐자원거점 수거센터 구축 추진(~'21)
- 2 유가물질 회수 등 재활용기술 개발 및 재활용산업 육성 추진

## 10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 1 저소득층, 어르신 생활공간에 실내 유해물질 진단 및 시설개선  
\*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주거시설 등에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사업 지원('20년 10억원)
- 2 환경성질환(아토피 등)이 있는 소아·청소년에게 진료·검사비 지원

## 고 용 노 동 부

### 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취업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② 개인 생애 맞춤형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시행

- 개인의 생애에 걸친 맞춤형 능력개발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 (기존) 실업자·재직자를 구분하여 1년/3년간 200~300만원 지원 → (개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5년간 300~500만원 지원

### ③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현장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산업 수요 맞춤형 훈련' 도입(훈련과정 설계·운영 등에서 기업·산업계가 주도)  
\* 기업수요 맞춤형: 우수훈련기관 등 선별 기업이 원하는 훈련을 맞춤형으로 설계·운영  
산업수요 맞춤형: 산업별 협·단체가 청년 등 대상 산업계 필요 훈련 제공

### ④ 지역이 중심이 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 고용위기 '前 단계'의 지역이 고용문제를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 일자리창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근로조건·고용환경개선 등을 패키지로 설계  
\*\*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원 지원

### ⑤ [청년] 구직청년 및 청년채용기업 지속 지원

- 청년-中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3대 핵심사업 지속 추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년 20만명 → '20년 29만명, 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19년 25만명 → '20년 34.2만명 임금상한 하향(월 500→350만원 '20~) 등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20.下~)하고 고용서비스 내실화

### ⑥ [여성] 육아휴직제도 등 개선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건 조성

- ①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20.2월 시행 예정),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제도 개선\* 및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확대

\*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 지급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20.上 시행 예정)

- ② 육아휴직 부여·대체인력 채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사후 지급방식 개선  
(사용기간중50% 지급 '20.1.1 시행예정,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확대(19년 10만원→20년 18만원)

7 [중·장년] 신중년 취업지원 강화 및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 ① (40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Ⅱ 중장년층(35~69세) 반영·확대 등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 ② (5~60대)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고용 하는 사업주 지원 제도 신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도입('20.5월) 등

8 주 52시간제 정착 및 근로시간 단축 확산

- ①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연착륙 지원 및 탄력근로 등 보완입법 지속 추진
- \* ▲계도기간 부여(1년),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등 대응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인력채용 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 등
- ② 근로시간 단축 확산을 위해 신규채용 인건·노무비 지원, 기존 재직자에 대한 생산성 향상 지원 등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터혁신지원,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등

9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속 추진

- ①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신규 지원
- \* 보건·IT 등 직무평가도구 既 개발 8개 업종별 2~3개사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노동研)
- ② 지역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대상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도입 우선지원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 공감대 확산

10 산업재해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①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 \* ('20년)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21년)돌봄서비스 종사자, IT업종 등 검토
- ② 저소득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과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인 산재보험료 경감 추진

## 여 성 가 족 부

### 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

- ① 경력단절여성 대상 유망 직종 직업훈련 지속 확대 및 VR(가상현실)을 이용한 모의면접 콘텐츠 개발·활용
- ②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 인력(10명 → 20명) 및 경력단절여성 창업 지원 인력 확충(30명 → 40명)

\* 상담-훈련-취업연계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

### ② 경력단절 예방 지원 및 대표성 제고

- ① 재직여성의 고충·노무 상담 및 기업의 직장문화개선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기관 확대(35개소 → 60개소)
- ② 기업 내 여성역량강화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연구조사, 기업지원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③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 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확산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 현황(08~'19) : 대기업 407개사(10.6%), 중소기업 2,445개사(63.8%), 공공기관등 980개사(25.6%)
- ② 가족친화인증제와 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 간 연계 강화  
\*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 체결('19.11월)

### ④ 여성인권보호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법인 출범 등 여성안전 총괄 기능 강화 및 여성폭력 통계 구축
- ② 청년 주도의 성평등 문화혁신을 위한 ‘청년참여 플랫폼’ 지역 확산

### ⑤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①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내실화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신규 222명)
- ②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3만명 → 3.4만명) 및 수요자 대기관리시스템 구축



## 6 다양한 가족 인식 개선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①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 개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교육 등 포용인식 확산
- ② 돌봄, 생애주기별 상담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가족센터 설치(64개소)
- ③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 인력 확대 배치(44명→254명)

## 7 지역기반 공동체 돌봄 환경 조성

- ① 마을공동체를 통한 돌봄 지원을 위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 시범사업 운영(15개 지역)
- ②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268개소)

##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강화 및 전담인력 확충

- ① 위기청소년 통합관리를 위해 지자체 내에 ‘청소년안전망팀’ 신설(9개소) 및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시범사업 지원(신규 2개소)
- ② 고위기청소년 집중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시범운영(신규 17개소)
- ③ 가출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90명 → 124명) 및 청소년동반자(1,316명 → 1,377명) 확대

## 9 청소년 보호 시설 환경 개선

- 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진로탐색, 직업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급식지원 및 전용공간 설치(신규 20개소)
- ②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청소년 쉼터 환경 개선 추진

## 10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청소년 성장 지원

- ① 중앙·지역 단위 청소년 특별회의 활성화 등 청소년 참여 강화
- ② 청소년의 미래인재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및 추진 체계 개편



## 국 토 교 통 부

### ①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주택 조기 착공

- '20년 착공예정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주택 8.2만호 중 1만호는 착공 일정을 당초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추진

### ②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조기화

- 조기 주택공급을 위하여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 지구는 '20년 지구계획 수립 추진, 3차 지구는 '20년 상반기 지구지정

### ③ 도로·철도 등 SOC 신속 추진

- ❶ (간선도로망) '20년 고속도로, 국도 및 국지도 신규착공 38건, 계속공사 155건, 준공 28건 사업추진

\* (착공)당진-천안 등 38건, (계속)서울-세종 등 155건, (준공)밀양-울산 등 28건

- ❷ (광역·혼잡도로망) '20년 광역도로 및 혼잡도로 신규착공 8건, 계속공사 18건, 준공 5건 사업추진

\* (착공)초정-화명 등 8건, (계속)동부간선 등 18건, (준공)산성~구례 등 5건

- ❸ (철도망) '20년 주요 간선 철도망 착공(4건), 개통(8건, 부분개통 포함) 등 사업 추진

\* (착공)경의선 임진강~도라산 전철화 등 4건, (개통)대구선 동대구~영천 등 8건

- ❹ (광역·도시철도망) '20년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신규착공 1건, 계속공사 12건, 준공 2건 사업추진

\* (착공)인천1호선 검단연장, (준공)하남선 광역철도, 인천1호선 송도연장

### ④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거점 조성

- 산업·주거가 결합된 복합앵커시설, 창업시설, 소상공인 특화 지원센터 등 지역특성과 연계된 사업시행\*

\* 5개소(경기도 군포시, 경북 영천시, 부산 사상구·영도구, 인천 동구) 선정('19.11.22)

## 5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 첨단과기단지 1단지 확장 및 연계사업으로 IT·BT·ET·CT 등 첨단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

## 6 도시재생 사업 체계 재편을 통한 성과 조기화

- 기존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행력 높은 재생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혁신지구 등 新재생수단\* 도입

\* 총괄사업관리자,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 7 노후 SOC 개선사업 조기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노후 SOC 개선투자(5.5조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토록 특별관리(범부처 TF 구성)

\* 재정 조기집행률을 SOC 목표치 60%보다 상향 목표 설정

## 8 해외건설 활성화

-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정책금융기관 등과의 분야별 협업 및 투자사업 발굴

## 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타면제 사업) 집중관리

- 국도위험구간 등은 신속히 착공하고, 고속도로·공항은 「기본계획」 수립, 철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별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 10 외국인관광객 유치, 금융·세제 지원을 통한 항공산업 성장동력 확보

- 1 지방공항과 연계한 항공-교통-관광 공동 프로모션, 지방공항 환승 편의시설 확충(무안공항) 및 입국장 면세점 주요공항(김포 등)으로 확대
- 2 민관공동 항공기 공적보증 신설, 항공기 관련 수입 부분품(엔진, 항행용 기기 등) 부가세 면제로 항공분야 투자 촉진

## 해 양 수 산 부

### ① **신항, 거점항만 인프라 확충 및 노후항만 SOC개선**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항 인프라 지속 확충과 지역거점 항만 개발\* 및 주요 노후·유휴항만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 부산 제2신항(예타 진행), 인천신항 / 전북 새만금, 울산신항, 광양항

\*\* 부산북항 1~2단계, 거제 고현항 2단계, 인천 영종도 투기장 등

### ② **해운산업 재건 가시화**

- ① 초대형·친환경 선대 확충, 선화주 상생을 통한 안정적 화물확보, 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해운재건 계획의 가시적 성과 창출

\* 현대상선 The Alliance 개시('20.4) 및 2.3만TEU 초대형선 투입

- ②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세제지원, 항만사용료 감면, 정책금융 조건 개선 등) 부여 및 중소선사 지원 사각지대 해소(한국해양진흥공사)

\* 우수 포워더가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 중 일부의 세액공제 추진

### ③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출확대**

- ① 수산물 수출 클러스터(전남)·중규모 식품거점단지 7개소 조성 및 김공장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등 수산식품 산업 중점육성

- ② 해외 박람회·무역상담회 및 프리미엄 인증제 지원 등으로 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수산수출 시장 다변화

### ④ **어촌뉴딜 300사업 확대**

- 생활밀착형 SOC 대표사업인 어촌뉴딜300의 '20년 신규 120개소 추진으로 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연안경제 활성화

\* '20년도 신규 120개소 내외 추가선정('19.12),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등 착수('20.上)

## 5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섬관광 활성화

- 권역별 거점·해양치유센터·마리나항만 등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 및 섬관광 활성화 추진 등 콘텐츠 강화

## 6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스마트양식 선도사업 추진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항만자동화 실증과 스마트양식 시범사업 및 한국형 e-Nav 시범운영 등 핵심선도사업 본격 추진

\* (자율운항선박) '20~'25, 1,603억원, 해수-산업부 공동 핵심운용기술 개발

\*\* (광양항 항만자동화) 산업클러스터부지 내 실규모(1:1 scale) 성능검증 착수

## 7 신산업 육성과 창업투자 확산

- 해양수산 신성장동력 창출과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5대 산업\* 육성, R&D지원 강화 및 투자펀드 확대로 중소벤처 투자·창업 확산\*\*

\* ①해양바이오, ②해양관광, ③친환경선박 연관, ④첨단 해양장비, ⑤해양에너지

\*\* (R&D) 31개 기업, 127억원 / 해양(200억원)·수산(70억원)모태펀드 추가 조성 등

## 8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및 안전 강화

- 도서민 여객·차량 운임할인 확대,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준공영제 정착으로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

\* 도서민 여객/차량 운임할인 확대,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준공영제 항로 확대 추진

## 9 해운항만물류기업 대형화

- 중소선사 컨테이너 통합법인의 시장안착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고, 부산북항·인천신항 터미널 운영사 대형화로 운영 경쟁력 제고

\* 부산북항 통합법인 출범('20.초), 인천항 신항 공동운영법인 설립('20.초)

## 10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확대

-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한 시범 항만배후단지 조성으로 민간 투자 확대와 지역산업 특화연계 등 지역 일자리·물량창출 촉진

\* 인천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 부산신항 웅동2단계, 평택당진항 2-1단계 등

## 중 소 벤 처 기 업 부

### 1] 스마트 대한민국(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 구축

-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KOREA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 신규 추진

- ▶ 기반조성 : 제조 데이터 센터·플랫폼 신설, AI 인프라 구축 등
- ▶ 스마트공장 : 대기업의 노하우를 접목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
-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 및 경영 스마트화에 필요한 ICT 솔루션 지원
- ▶ 스마트상점 : 스마트상점 신기술 보급(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스마트맵)

### 2] 신산업 혁신창업과 스케일업 강화를 통한 “4대 벤처강국” 구현

- AI 등 신산업 분야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스케일업 중심의 창업·벤처정책을 통해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

- ▶ 기반조성 :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발행 허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면개정
- ▶ 신산업 육성 :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250개사 발굴·육성
- ▶ AI : AI올림픽 신설, AI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 ▶ 유니콘기업 : 총 2,000억원 규모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40개 유망기업 발굴·육성
- ▶ 벤처투자 : 혁신창업펀드 0.7조원, 스케일업펀드 3.2조원(중기부·금융위 공동) 조성

### 3] 국가대표 “브랜드-K” 로 중소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 한류(K-Beauty, K-Pop, K-Food)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선수 ‘브랜드-K’를 확산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 ▶ 브랜드-K : 브랜드-K 확산전략 수립(20.1/4), 해외홈쇼핑 등에 브랜드-K 특별전 편성
- ▶ 해외진출 : 스타트업해외거점(KSC) 2개소 추가 개소, 프랑스·독일 등과 협력사업 추진

### 4] “소상공인 1인 미디어”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

- 1인 미디어 플랫폼, 가치샵시다 TV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가치샵시다’ 등 소상공인 브랜드 확산

- ▶ 1인미디어 : 1인 미디어 플랫폼, 가치샵시다 TV 등을 통한 방송 지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오픈 스튜디오 운영 전문인력(1인 크리에이터, 방송전문인력 등) 교육 등
- ▶ 소상공인 브랜드 : 가치샵시다 캠페인,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정 확대
- ▶ 재기지원 : 재기지원센터, 법률자문 확대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방안 마련(3월)

### 5] “로컬크리에이터, 상권르네상스” 등 골목상권 활성화

-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지역상권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등으로 사람이 모이는 골목상권 조성

- ▶ 상권활성화 :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140명), 상권 르네상스 추가선정(7곳)
- ▶ 전통시장 :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15곳),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20년 2.5조원)

## 6 “자상한 기업” 등 상생협력 확산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

- ‘자상한 기업’ 확산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복지 플랫폼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기업 수준의 복지 제공
  - ▶ 대·중소 상생 :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시리즈로 발굴·홍보, 동반성장 평가대상 공공기관 확대(‘19년 58개 → ‘20년 133개)
  - ▶ 복지강화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확대, 기업이 근로자에 복지포인트 지급

## 7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등 공정경제 환경 조성

-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율적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 ▶ 상생조정위원회 : 기술침해, 불공정 조정·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 운영(민간 전문가 및 중기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 ▶ 제도개선 : 사전사업조정협의제 도입, 수위탁분쟁제도 개선(분쟁조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

## 8 “지역혁신 전략 수립” 등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

- 지역별 지역혁신 전략 수립 등으로 체계적인 지역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신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
  - ▶ 지역혁신 전략 : 지역주도의 지역혁신성장 계획을 마련,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역기업 혁신성장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잠재·예비기업 1,300개사)
  - ▶ 규제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3차 지정(상반기 내),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특구사업자 범위 확대, 다른 국책사업 연계 등)

## 9 “상생모델” 등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분업적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등으로 유망기업 집중 육성
  - ▶ 상생모델 : ‘대·중소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집중지원
  - ▶ 유망기업 육성 : ‘강소기업100 + 스타트업100’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R&D, 자금 등을 집중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 기타 : 소부장 전용펀드 1,000억원 조성, 보증 1조원 지원 등

## 10 “경영회생 300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 선제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300개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자금·판로·마케팅 연계확대 등을 통해 사업전환 지원 강화
  - ▶ 유망기업 지원 : 중진공, 신·기보 등이 성장 잠재성이 높은 경영애로 중소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금융·컨설팅 연계 지원
  - ▶ 사업전환 : 사업전환기업에 자금, 스마트공장 및 지식재산 인수비용 등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

## ① 하도급대금 지급·조정제도 개선

- ① 중기중앙회 조정협의권 부여, 조정신청 사유 확대 등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개선(하도급법 개정)
- ② 하도급대금이 2차 이하 하위 거래단계까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산 유도\*

\* 상생결제 등을 통한 2차 협력사 대금지급이 활성화되도록 시스템 이용률 만점기준을 상향하고 이용실적 평가대상 업종 확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 ② 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①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산 및 표준대리점 계약서 보급업종 확대(기존 6개→12개)

\* 거래당사자(원-수급사업자, 가맹본부-가맹점, 유통-납품업자, 공급업자-대리점) 간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

- ② 점주 단체활동 보복 및 불합리한 계약갱신 거절(가맹), 판촉비 전가(유통),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대리점) 등 고질적 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

## ③ 중기협동조합·소상공인 단체 공동행위 허용

- 중기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단체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 허용\*(고시·지침 제정)

\* 가격인상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동행위 허용

##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표준계약서 도입·확산

- 공정한 계약관행 형성을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확산(관계부처 협업)

\*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금융위), SW개발자(과기부) 등의 직종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표준계약서 제정

## ⑤ 공공기관이 앞장서 거래관행 개선 등 공정문화 정착·확산

- ① 모범사례가 될 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거래 관행 개선을 촉진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유도
- ② 지방공기업도 공정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파급력이 큰 주요 지자체 공기업부터 모범사례 발굴



## 6 대기기업집단 자율적 일감나누기 유도

- 물류, SI, 광고대행, MRO 등 내부거래가 많은 분야에서 대기기업집단의 자율적 일감 개방 유도\*

\* 일감나누기 실적(계열사 거래의 비계열사 거래 전환 실적 등)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반영

## 7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 및 지배구조 개선 추진

- 1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지주회사 제도 보완 등 대기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속 추진

\* 공동손자회사 금지 명확화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강화 등

- 2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제재

- 3 공정위-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통해 사익편취행위·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 8 SNS상 1인 마켓인 세포마켓 활성화 지원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 적극 검토 및 캠페인 등 홍보 강화

\* 예: (현행) 거래횟수/규모: 20회/1,200만원 미만 (최근 6개월 기준)

→ (개선) 거래횟수/규모: 40회/4,800만원 미만 (직전년도 기준)

## 9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 1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주요 구독경제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 2 SNS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SNS 인플루언서의 대가 지급 표시의무 명확화\*(지침 개정)

\* 사업자 및 소비자 주의사항 가이드라인 배포 등

- 3 육아 관련 산재한 정보\*를 행복드림(소비자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통합 제공하여 소비자의 보육기관 선택 지원

\*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정보, 어린이집의 평가 정보 등

## 10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 및 안전기반 확충

- 1 렌터카 사고수리비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 2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감시 및 공동조치, 안전기준 마련



# 금 융 위 원 회

## ①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신설

-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3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5조원 등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우대금리(1.5%)로 4.5조원을 공급

## ② 소비촉진을 위한 금융거래서비스 제공

- ①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하여 한 번에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②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통해 휴면 재산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7% 할인 제공

## ③ 가계부채 관리, 시장중심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안정 확립

- 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20.1월~)
- ② 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20.4월)하고, 기업 구조혁신펀드 규모를 확대(1.6→2.6조원)

## ④ 혁신·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

- ①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스케일업 펀드(3.2조원, 금융위·중기부 공동)를 조성하여 성장단계 기업에 대규모 자금 공급
- ② 금융투자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부담 완화

## ⑤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 질적 업그레이드

- '규제혁신 활용 성공사례집' 제작·배포, 국민호응도가 높고 안정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법령 정비 추진

## ⑥ 일반 국민의 주거비용 경감

- ①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60세→55세 이상)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현실화(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
- ②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 신규 출시('20.6월)

## ⑦ 정책서민금융을 통한 서민지원 강화

- ① 청년·대학생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sup>youth</sup>를 출시('20년 1천억원)하고, 햇살론<sup>17</sup> 공급규모를 확대('19년 4천억원 → '20년 5천억원)
- ②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복권기금 출연기간 연장(~'20년→~'25년) 및 출연규모를 확대하고, 의무 출연대상을 소금융권으로 확대

## ⑧ 채무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연체차주 신용회복 지원

-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및 연체채무자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 ⑨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 ① 휴·폐업자에 대한 자영업자 재기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19.11월~)
-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등에 특별금리 대출을 공급(2.7조원)하고,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지원\*

\* 은행 등 금융권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장성, 매출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대출

## ⑩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거래 편의제고

- ① 금융소비자 보호 법적 기반\* 구축, 약관개선 및 TV광고 규율 강화 등 관련제도와 관행을 종합적으로 개선

\* 새로운 소비자 권리 도입,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실효적 피해구제 등

- ②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관련업계 의견 신속 조율 및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